



[뉴스]
흔들리는 자영업
가로수길 가보니
줄폐업에 상권 위기
03

車-包 땐 소득주도론, 실패 예견된 경제실험

〈차: 성장〉 〈포: 고용〉



❶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

#. 지난 1월 서울 마포역에서 15분 거리의 골목길에 조그만 김밥 가게를 시작한 김가난(가명·56)씨는 최근 임대료 내기도 벅차다. 인근에 유명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선 이후 그나마 있던 손님까지 빼앗겼기 때문이다. 폐업을 고민 중이다. 보증금에 보내려고 저축은행에서 빌린 2000만원까지 날릴 수 없어서다. 김 씨는 “은행에서 5000만 원, 저축은행에서 2000만원 정도 대출받았는데 장사가 신통치 않아 걱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면서 빛 걱정에 주름살이 하나 더 늘었다고 하소연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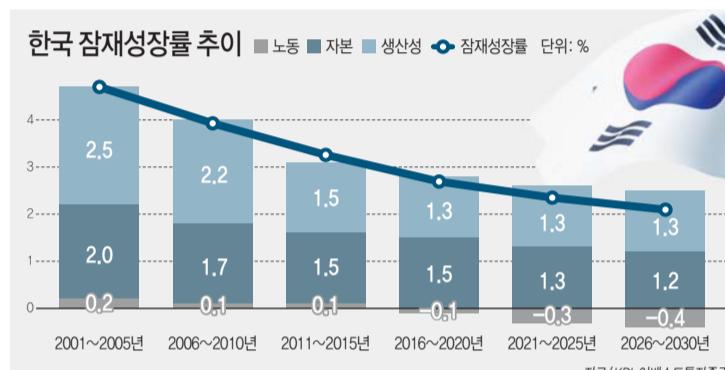
‘J노믹스’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빛을 잃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 증대 정책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면 소득 분배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란 성장 공식이 현실 경제에선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 이대로라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장담하는 올해 3% 성장도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고, 국민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쓸 돈이 없다는 게 이들의 애우성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분배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성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개념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케인즈 → 슴페터, 경제철학의 전환 필요〉

	케인즈식 경제정책	슘페터식 경제정책
경제 인식	불황의 원인은 수요 부족	불황의 원인은 혁신(공급)
정책 목표	완전 고용	구조적 경쟁력 강화
	단기 경제변동 관리	장기 경제성장
정책 수단	총수요 관리 (재정정책·금융정책)	재정정책은 일부 인정 금융정책은 정치적 제스처이며 정책효과 없음 (금융은 혁신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이 중요) 장기 구조개혁(혁신적 경쟁환경 조성)
기간	단기	장기

자료: 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난달 CCSI 4.5% 하락
설비투자는 -6.6%로 뚝
취업 증가폭 10만명 대

소득증가 양극화도 심화
저소득층 소득 8% 줄고
상위 20%는 9.3% 늘어

공공투자 확대를 주문한다. 또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4차산업 시대에 기업들이 살아남을 먹거리 를 찾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한 점은 고무적이란 평가다.

◆ 소득은 늘었는데, 일자리·소비·투자↓

‘소득주도성장’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 ‘소득주도성장’이 근거한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현실은 따로 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101.0으로 한 달 전에 비해 4.5포인트 하락, 지난해 4월 수준(100.8)으로 되돌아갔다. 하락폭은 2016년 11월 (6.4p) 이후 최대폭이다.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설비투자는 1분기 3.4%에서 2분기 -6.6%로 급락했다. 2016년 1분기(-7.1%)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달 20만~30여만명에 이르던 취업자 증가폭은 올 들어 10만명 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최근 15~29세 실업률은 9% 수준에 달하고, 30~34세 실업률 역시 상승 추세다. 통계청은 최근의 취업자 수 감소를 판단하는데 인구의 증감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숫자놀음’이란 지적이다. 시장 한 전문가는 “고용증가를 주 정책으로 하는 정부에서 인구증가를 맞춰서 고용이 늘어난다면 기존 상황의 유지 외에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고 말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소득은 늘었지만, 서민들은 빚 갚느라 소비는 엄두도 못 낸다.

올 상반기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뜻하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805조 1354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790조 125억 원보다 1.9% 늘었다. 최저임금도 16%나 올랐다.

소득증가도 양극화에 따른 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8% 줄어든 128만 6700원에 그쳤지만, 상위 20%(5분위) 소득은 9.3% 급증했다. 소득 1분위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율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5분위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관련 통계 작성(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3면에 계속)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과 2018년 3월 일부 유가지 전환을 통해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메트로경제가 미래 언론의 주역이 될 깊은 인재들을 찾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중산층, 국가경제에 기여를 하는 기업들을 위해 경제 위주의 기사를 발굴해 온라인, 모바일, 지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6년 역사의 메트로경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취재기자 (수습)

-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 2차 : 취재 역량평가
- 3차 : 면접(블라인드 방식)

■ 모집인원 0 명

■ 응시자격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도 응시 가능)

- 〈공통사항〉 ①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 우대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본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지원서와 수험표 부착)

※ 이메일 접수자 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 2018년 8월 10(금)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6시까지
-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8월 2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년 8월 24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 (전화 02-721-9826)

metro®

주행 중 시동꺼짐 12회, 교환 받은 차량도 6회 발생

차량 교환요구에 벤츠 “감가비용부터 내라”

안전 직결 중대한 문제에도
감가비용지불 규정 내세워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감가상각비용을 먼저 지불하라는 벤츠의 규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BMW가 520d 차량 화재로 대대적인 리콜에 들어간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서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에 사는 백진욱(45)씨는 지난 2015년 벤츠 S63 AMG를 구입했지만 계속되는 시동 꺼짐 현상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 차량은 가격만 2억 700만원에 달한다. 그



는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오르막 길을 운전할 때 시동이 꺼졌다”며 “이 차를 타게 된 뒤 총 12번의 시동 꺼짐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벤츠 서비스센터에 정비를 맡긴 결과, 원인은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ECU)에 있었다. 이에 백씨는 지난 2016년 벤츠 측에 차량 교환을 요청했지만 감가비용 4400

만원을 지불하라는 말에 결국 2500만원을 부담하고 2016년 4월 신형 S63 AMG(2016년형)를 받았다.

문제는 백씨가 새롭게 교환 받은 신형 S63 AMG 차량에서도 시동 꺼짐 현상이 똑같이 발생한 것이다. 같은 문제가 6회 일어나자 백씨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벤츠 측에서는 이번에도 4500만 원의 감가비용을 부담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주행 중 시동 꺼짐은 차량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현행 법상 시동결함이나 브레이크 오작동 같은 증상이 3회 이상 동일하게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교환 및 환불 시 수천만 원대의 감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만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중대 결함이 3회 이상(기준 4회) 발생하면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강화했다.

(2면에 계속)
/정연우 기자 ywj964@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9일 오후 종교 광장 인근에서 시민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며,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다고 밝혔다.

/뉴스